

美 관세전쟁 경고에 '전차군단' 휘청... 車·반도체株 직격탄

트럼프, 반도체 관세 도입 압박
SK하이닉스·삼성 외국인 매도
현대차·기아 주가 목표 줄줄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자동차에 이어 한국 수출 주력 품목들이 잇따라 '관세 폭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뉴시스

'전차군단(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 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자동차에 이어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들이 잇따라 '관세 폭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3월 31일~4월 4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7100억원), 삼성전자(1조1000억원), 현대차(3200억원) 등 상호관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종목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유 있는 '팔자'라고 해석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대미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S&P는 미국의 전기차 지원 축소가 전기차 판매 둔화를 초래하고 미

국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국내 수출 118만대 중 미국향은 64만대(54%)이며, 기아 국내 수출 101만대 중 미국향은 38만대(38%)에 달한다.

현대차·기아가 국내 수출을 미국 중심으로 해 왔던 만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 외에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상호관세 46%), 인도(26%), 인도네시아(32%) 등도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호 관세 및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지 않는 한 미국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수록 국내 공장의 미국향 수출 감소는 불가피한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기아에 대한 투자이견과 목표주가를 하향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기아에 대한 투자이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2일에는 iM증권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28만원으로, 기아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내려잡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 추가도 관세전쟁의 그늘에 있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관세는 곧 시작될 것(very soon)"이라며 도입이 임박했음을 공식화했다.

다만 S&P는 하이테크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짚었다.

메모리 가격도 반등하고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수급 밸런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화되면서 가격 상승 전환 시기가 빨라졌다"며 "올해 영업이익의 상향으로 인해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메모리 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서게 되면 밸류에이션 또한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농심 웃고, 삼양은 울상... 생산지가 갈랐다

농심, 美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삼양, 국내 생산 수출... 대응책 고심



농심 신라면 차량이 미국 시내를 누르고 있다. /농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관세 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라면업계 대표 주자 농심과 삼양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농심은 현지 생산으로 관세 리스크를 피해간 반면 삼양은 전량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두 기업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동일 산업 내에서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6%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국가별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되던 한국의 수출 중심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심, 미국 내 경쟁력 더 커질듯

특히 라면은 지난해 대미 가공식품 수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출 비중을 자랑한 품목이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라면 점유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2005년 미국 LA에 첫 공장을 세웠고 2022년 2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총 2개 공장을 통해 연간 최대 8억5000만개의 라면을 공급 중이다. 미국 내 공장 생산되는 제품은 현지 생산이라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농심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34%가량이었지만 이 비중은 2021년 37%, 2022년 39%, 2023년 39% 등으로 높아졌다. 농심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40%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농심의 가장 큰 해외 시장으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25.4%다. 미국 시장에서 50%가량의 지배력을 보유한 일본 종합식품기업 도요수산에 이은 2위다.

◆삼양식품, 관세 리스크 불가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100%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결론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생산공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며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30년 뚝심' 국산 씨앗, 글로벌 밭 일군다

코스닥 기업 탐방

아시아종묘



아시아종묘 본사 모습. /아시아종묘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아시아종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세계인의 먹거리를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30년 넘게 한국 종자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이 회사가 국산 종자의 세계화를 목표로 내건 철학이다.

한때 한국의 채소 종자는 외국산에 크게 의존했다. 토마토, 고추, 양배추 등 농가에서 흔히 재배하는 작물의 씨앗조차 외국 기업에서 들여와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아시아종묘가 자체 개발한 종자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외국산 의존 넘은 종자 자립 선언
혈당잡는 고추·보랏빛 청경채 주목
R&D 투자로 스마트팜 시장 공략

지난 1992년 '아시아나 종묘'로 출발한 이 회사는 2004년 법인 전환, 2018년 코스닥 상장을 거치며 한 단계씩 성장해 왔다. 현재 양배추, 콜라비, 수박, 토마토, 오이, 멜론 등 다양한 품종을 자체 개발해 국내외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작물 개발에 주목한다. 단순한 생산량 증가를 넘어 건강 기능성을 갖춘 종자는 최근 글로벌 종자 시장에서도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종묘가 개발한 '미인꽃고추'가 대표적이다. 매운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낮추는 성분(AGI)이 함유돼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에 활용할 수 있다.

청경채도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보랏빛 잎을 띠는 '자색 잎 청경채'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종묘의 경쟁력은 탄탄한 연구

개발(R&D)에서 나온다. 국내 종자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이 쉽지 않다. 높은 비용과 인력 부담 탓에 많은 회사들이 종자 유통에 집중하지만, 아시아종묘는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

경기도 이전, 전북 김제, 전남 해남·영암에 있는 국내 4개 육종연구소에서 신 품종 개발이 한창이다. 해외 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인도와 베트남 법인에서는 현지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연구·개발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는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 병충해, 스마트팜 확산 등에 맞춰 새로운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종묘는 해외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와 베트남 연구소에서는 현지 농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을 개발 중이다.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같은 미래 농업에도 적극적이다. 2018년, 경기도 하남에 도시농업 전문 매장 '채가원'을 열고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우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단순한 종자 판매를 넘어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준비 중이다.

/김대환 기자 kdh@

금감원, 전직·진학으로 이탈 움직임 확산

승진 부담·높은 업무 강도에 이동

"다닐수록 현타(현실자가 타임) 오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자소서(자기소개서) 준비해야지."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취업생들 선망의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최근 이직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업무 강도가 높아진 데다 승진 후 재취업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외부로 나가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6일 인사혁신처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국장급 인사들이 대거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금감원 인사 7명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실장급 75명 중 74명을 교체한 대규모 인사 이후 조직 내 불안감이 커지면서 승진보다는 이직을 고려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특히 1급 승진보다 2급 이직을 택한 이들이 눈에 띈다. 3월 심사를 통과한 2급 간부 5명은 이번 달부터 키움증권 전무, 경남은행 상무, 부산은행 상무, 우리카드 상근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국이냐 검사국이었던 이력을 보고 데려

간 것이니 능력이나 업무연관성은 보고 채용한 것이고 '선·후배' 의식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권이 아니더라도 법무법인 세종, 주식회사 크림, 롯데칠성음료 등 다양한 곳으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직의 배경에는 '1급 승진의 불리함'도 있다. 1급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금감원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2급 이하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담당 부서와 관련된 업무로만 심사를 받아 이직이 상대적으로 쉽다.

저연차 직원들도 업무 강도를 회피하기 위해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